

AI Act



개요 및 배경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규제보다는 발전에 더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테스트 결과와 주요 정보 등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유럽은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난 13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AI 시스템을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규제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중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유사한 범죄 예측 시스템 등의 기술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 등 AI 기술 개발·활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고, 일본도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통해 일본 중심의 AI 국제 규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본법(안)'을 포함해 12개가량의 AI 관련 제정 또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일 정도로 AI에 대한 법제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제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통한 안전한 AI 산업 육성” vs “탄력적 규제를 통한 혁신적 AI 산업 육성”

중 최근 논의 중인 국내 AI 관련 법안에 대해 어떤 측면에 더 초점을 두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에세이를 쓰시오

엄격한 규제를 통한 안전한 AI 산업 육성

사전 규제적 성격을 띄고있는 이번 EU의 AI Act(AI 법)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AI 기술 활용에 전제된 인간의 존엄성, 윤리, 투명성의 원칙 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AI Pact라는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개발자들이 AI Act의 주요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자유롭고 안전한 AI 사용을 위해 위험도를 식별하고 그에 맞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여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규제로 유럽에서는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을 데이터화하고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은 전면 금지된다. 기본적으로 AI 규제법에 따라 AI를 활용한 실시간 생체 정보 수집 및 식별 시스템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 등 불 피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한 뒤 허용된다.

즉, 이는 그간 선언적으로 그쳐왔던 AI의 기본 원칙들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EU는 이 같은 규제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전 규제

- 정부나 국가가 특정 행동이나 활동을 미리 규제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규제의 목적은 특정한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
- 이는 종종 정부의 규제 기구나 규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엄격한 규제를 통한 안전한 산업 육성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 미국의 FDA는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엄격한 시험과 승인을 요구함.
- 이 규제는 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이를 통해 위험한 약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미리 걸러질 수 있음.

탄력적 규제를 통한 혁신적 AI 산업 육성

반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AI 관련 제정에 관한 입법 방향은 유럽과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러 법안 중 가장 논의가 활발한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경우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사전 규제보다는 산업 촉진 차원에서의 지원법 형태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14조 '인공지능 도입, 활용 지원'을 주목하면, AI 기술 개발 기업 뿐 아니라 AI를 기존 산업에 도입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AI 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통적으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온 미국의 경우, 자국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AI 진흥을 조력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확대 및 AI 연구를 위한 데이터 개방, AI 거버넌스 표준화 등이 담겼

다.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은 AI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M&A)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챗 GPT'도 이런 토대를 기반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이는 각국의 AI 관련 법 제정 방향이 그들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서로 다름을 다름을 시사한다. 나아가 한국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법

-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특정 분야나 집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
- 재정 지원: 보조금,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
- 정책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기반 시설 제공: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탄력적 규제를 통한 혁신적 산업 육성 사례 : 한국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
-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술 창업 지원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 로봇,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Reference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527호, 2024.3.25, EU '인공지능 규제법(AI Act)' 통과 의미와 시사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AI). (2020, January 23).

KISTEP 국제협력정책센터, 혁신정책, 2024.2.13, KISTEP 브리프 119,